

HEADLINE NEWS

21세기 창조적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비전 제시 (동경)

일본 東京都 교육위원회는 21세기 東京의 창조적인 발전을 담당할 인간 육성을 목적으로 「東京都 교육비전」을 수립하여, 都의 교육개혁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교육위원회는 「東京都 교육비전」수립 후에도 이 비전의 취지를 도민(都民)들에게 적극 알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東京都 교육비전」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은 첫째,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 둘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인간, 마지막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성과 창조력이 풍부한 인간 등이다. 교육비전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KEIKAKU/2004/04/70e49100.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9.11 테러」 이후 건축법 대폭 개정 추진 (뉴욕)
- ② 교외에서 도심으로의 회귀 증가 (뉴욕 대도시권)
- ③ 난개발 방지 위해 엄격한 도시성장관리규정 채택 (매릴랜드주: 캐롤 카운티)
- ④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금융권이 적극 참여 (L.A.)

도시환경

- ⑤ 교통혼잡비용 징수 이후 대기오염이 줄어들어 (런던)
- ⑥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도입 (시애틀)

도시교통

- ⑦ 통행료 전자징수시스템의 편의 산정 연구결과 발표 (뉴저지주: 트렌턴시)
- ⑧ 교통정보 수집을 위해 관용차량에 센서 장착 추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
- ⑨ 노년층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안내 표지판 개선 (텍사스주: 포트워스시)

사회복지·문화

- ⑩ 복지서비스 향상 위해 「제3차 평가기구」 설립 (일본: 카나가와縣)
- ⑪ 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 (핀스베이거스)

행재정

- ⑫ 호화주택에 대해 추가세금 부과 추진 (뉴저지주: 트렌턴시)
- ⑬ 외국국적 주민과의 '공생사회' 실현 위한 시책 추진 (오사카)

① 「9.11 테러」 이후 건축법 대폭 개정 추진 (뉴욕)

미국 뉴욕시는 조만간 건축법규와 조례를 광범위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市에서 지정한 엔지니어, 건축가, 안전전문가, 부동산 개발업자 등 13명의 위원들은 건축, 소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관련법규를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市는 지난 9.11 사태의 영향으로 이번 개정법에는 특히 건물내부의 소방 스프링쿨러, 비상사태시 비상구의 조명 등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축 관련법규들을 통합하고 필요없는 규제들을 삭제하는 등 市를 건축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query.nytimes.com/gst/abstract.html?res=F00F13F83F5B0C748DDDAC0894DC404482)

② 교외에서 도심으로의 회귀 증가 (뉴욕 대도시권)

지난 수십년간 미국 뉴욕 대도시권지역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어왔던 교외화(Suburbanization) 현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미국 럿거스(Rutgers) 대학 Hughes 교수와 Seneca 교수는 뉴욕 대도시권의 31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교외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교외지역으로의 인구 증가 속도가 감소하는 동시에 도심으로의 회귀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오픈스페이스 보존프로그램의 확대에 의한 개발가능토지의 감소, 교외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교통체증, 가구 특성 변화, 도심주거를 선호하는 주택소비행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www.nytimes.com/2004/05/19/nyregion/19sprawl.html)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③ 난개발 방지 위해 엄격한 도시성장관리규정 채택 (매릴랜드주: 캐롤 카운티)

미국 매릴랜드주 캐롤(Carroll) 카운티는 그동안 개발우선정책을 통해 개발업자들이 쉽게 교외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2004년 6월 10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도시개발 규정에 따르면, 개발업자들은 개발 전에 학교, 도로, 유틸리티, 긴급서비스 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그동안 개발우선정책으로 인하여 교외지역이 과잉·난개발됨으로써 교통체증, 환경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 심각한 부작용이 파생되어 왔기 때문이다.

(www.baltimoresun.com/news/local/carroll/bal-te.ca.growth17may17,0,5439817.story)

④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금융권이 적극 참여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시의 비영리 단체인 'Genesis LA Economic Growth Corp.'은 현재 시티은행, 워싱턴뮤추얼, 기타 은행들을 통해 57,000,000달러를 조성, 개발업자들이 도시내부의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평가될 경우, 서민주택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대도시에도 이 프로그램이 적용될 예정이다. (www.realestatejournal.com/propertyreport/residential/20040503-kim.html)

⑤ 교통혼잡비용 징수 이후 대기오염이 줄어들어 (런던)

영국 런던시내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혼잡비용 징수 후 시의 대기오염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암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는 혼잡비용 징수지역에서 12% 감소했고, 일산화탄소는 약 1/5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온실효과와 스모그를 일으키는 이산화질소는 1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thisislondon.co.uk/traffic/articles/10733654?source=Evening%20Standard)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⑥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도입 (시애틀)

고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산업에도 대체에너지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휘발유-전지 겸용 하이브리드차가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시애틀市는 최근 'GM Ford'社로부터 디젤-전지 겸용 하이브리드 버스 235대를 도입하여 연간 75만갤런의 휘발유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에너지 버스의 도입으로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중앙일보, 2004. 6. 3)

⑦ 통행료 전자징수시스템의 편익 산정 연구결과 발표 (뉴저지州: 트렌턴市)

미국 뉴저지州에서 운영중인 전자 통행료 징수(Electronic Toll Collection) 시스템의 편익 산정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 9월부터 시행된 E-ZPass 시스템의 편익 산정을 위해 사업 시행 전후 비교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9개 통행료 징수소를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1,800,000시간, 트럭에 대해서는 연간 291,000시간의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료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200,000갤런의 연료가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행료 징수소에서의 혼잡완화 효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www.benefitcost.its.dot.gov/ITS/benecost.nsf/ByLink/BOTM-May2004)

8 교통정보 수집을 위해 관용차량에 센서 장착 추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

미국 미네소타주 당국은 교통정보 수집을 위해 경찰차, 응급차량 등을 포함한 주정부 소유의 관용차량에 센서를 장착할 계획이다. 이 센서는 장착 차량의 위치, 속도, 이동방향 등을 기록함과 동시에, 차량 외부기온 측정, 전조등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해 기상정보까지 수집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통제센터로 보내지며, 이를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상황 안내 및 도로 기상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센서 장착은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04/05/0521_040521_smartcars.html#main)

9 노년층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안내 표지판 개선 (텍사스주: 포트워스시)

미국 텍사스주의 포트워스(Fort Worth)시는 노년층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안내 표지판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설치되는 안내 표지판은 최근에 공표된 연방도로국의 기준에 맞춰 기존의 4인치(약 10cm) 크기의 글자 대신 6인치(15cm) 크기의 글자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표지판의 높이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8년에 걸쳐 1백만 달러를 들여 15,000개의 교통안내 표지판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동안 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낡은 교통표지판조차 개선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계획은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노년층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노년층 운전자 관련 교통안전조치의 중요성이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www.dfw.com/mld/dfw/news/8574525.htm)

복지서비스 향상 위해 「제3자 평가기구」 설립 (일본: 카나가와현)

일본 카나가와(神奈川)현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개호(介護),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적절한 제3자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카나가와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 추진기구」를 2004년 6월중에 설립했다.

이 기구는 복지서비스를 평가하고자 하는 단체에 평가인증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평가조사원의 육성을 도모하며, 공정하고 질높은 제3자 평가를 정착시키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은 보조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기구 운영은 민간에 위임한다.

(www.yomiuri.co.jp/e-japna/kanagawa/news006.htm)

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 (라스베이거스)

미국 라스베이거스시는 “남부 네바다 건강관리계획의 날(the Southern Nevada Health Care Planning Day)”을 맞이하여 ‘노인법률프로젝트(the Senior Citizens Law Project)’, ‘네바다주 소수민족·보건정책센터(the Nevada Center for Ethics and Health Policy)’와 함께 최근 노인복지센터(the East Las Vegas Community Senior Center)에서 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지방검사들이 건강 및 복지지원과 관련된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을 도운 이번 행사에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고,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건강검진, 흥겨운 오락, 식사가 제공되었다.

(www.ci.las-vegas.nv.us/108_8181.htm)

④ 호화주택에 대해 추가세금 부과 추진 (뉴저지주: 트렌턴市)

미국 뉴저지주는 최근 호화주택에 대해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맥맨션(McMansion) 부동산 세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10억원 이상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격의 1%를 추가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억원일 경우 1천만원의 추가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25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맥맨션은 규모와 가격이 보통주택에 비해 2~3배 이상 크거나 높은 주택을 말하며, 최근들어 미국 전역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www.forbes.com/newswire/2004/02/25/rtr1275586.html)

④ 외국국적 주민과의 ‘공생사회’ 실현 위한 시책 추진 (오사카)

현재 일본 오사카(大阪)市에는 약 122,000명의 외국국적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市는 이러한 외국국적 주민들이 한 개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 주민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市는 「오사카市 외국국적 주민 시책 기본방침」을 기초로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등록법의 개정과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신속한 교부 등 외국국적 주민의 인권을 배려하도록 중앙정부에도 요구할 방침이다.

(www.city.osaka.jp/media/shisei/2004_4/month/index.htm#month4)